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13
2014. 2

02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2014.1.1~1.31)

건축문화 부문

- 충남도 3차원공간정보시스템 새단장
- "일사편리" 서비스 2014년 1월 18일부터 "전국 시행"
- 2030년 대구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 내손 안에 「스마트 국토정보」 버전3.0 출시

녹색 건축·도시 부문

-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도 시행
- 새고 있는 건물에너지! BEMS로 스마트하게 잡는다
- 대전시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거듭 난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추가 지정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20.9조 원으로 확정
- 대구시, 저소득층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출발'
- 부산시, 마을만들기 사업 특별교부세 23억 8천만 원 확보
-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착수
- 도시개발 해외진출 지원, 실효성 높아진다
- 서울시, 빛환경 개선으로 어두운 주택가 밝길 밝힌다
- 1.13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발자금대출 시행
-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 전라남도,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회 준다
- 광주시, 주거용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 대전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경상남도, 건축법위반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 인천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 ② 국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
-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 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포
-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착수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대책 본격 시행
- 공공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응적률인센티브제도 신규적용 시행
- 환경·국제기구도시 위상에 걸맞은 옥외광고물 추진
- '충청남도 건축 관련 기본계획' 전문가 의견 청취
- 올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1750동 철거
- 정부, 올해 385개 공간정보 사업 추진... 2,946억 원 규모
-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주택을 개조해 드립니다!
-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분할 "지금 신청하세요."
- 토지정보를 하나로! "부동산종합공부" 제도 시행

APU Story 일곱 번째

이타미 준 바람의 조형

(auri)

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

2014년 2월호 (통권 13호)

- 발 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 발행일 : 2014. 2. 28
 - 발행인 : 제해성
 - ISSN : 2288-274X
 - 편집·인쇄 : 알래스카인디고(주)
 - 기 획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관양동)
아크로타워 B동 706-1호
 - 연락처 : 031-478-9845
 - 이메일 : kslee@auri.re.kr(이경신)
-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5 이달의 정책 Highlights
	6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	
건축문화 부문	8 충남도 3차원공간정보시스템 새단장
	8 “일사편리” 서비스 2014년 1월 18일부터 “전국 시행”
	9 2030년 대구의 미래 모습은 어떨까?
	10 내손 안에 「스마트 국토정보」 버전3.0 출시
.....	
녹색건축·도시 부문	11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도 시행
	11 사고 있는 건물에너지! BEMS로 스마트하게 잡는다!
	12 대전시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거듭 난다
	1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추가 지정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14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20.9조 원으로 확정
	16 대구시, 저소득층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출발’
	17 부산시, 마을만들기 사업 특별교부세 23억 8천만 원 확보
	17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착수
	18 도시개발 해외진출 지원, 실효성 높아진다!
	18 서울시, 빛환경 개선으로 어두운 주택가 밤길 밝힌다
	21 1.13일 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 시행
	21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22 전라남도,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회 준다
	22 광주시, 주거용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22 대전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22 경상남도, 건축법위반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23 인천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23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 ② 국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
	24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 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2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포
	27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착수
	27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대책 본격 시행
	28 공공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9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신규적용 시행
	29 환경·국제기구도시 위상에 걸맞은 옥외광고물 추진
	30 ‘충청남도 건축 관련 기본계획’ 전문가 의견 청취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31	올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1750동 철거
	31	정부, 올해 385개 공간정보 사업 추진... 2,946억 원 규모
	32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주택을 개조해 드립니다!
	33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분할 “지금 신청하세요”
	33	토지정보를 하나로! “부동산종합공부” 제도 시행
<hr/>		
APU Story 일곱번째	34	이타미 준 바람의 조형

Highlights

건축문화 부문

2014년도 1월,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충남도청, 대구광역시에서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월 18일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해오던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대국민 서비스인 '일사편리'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1월 28일부터는 '스마트 국토정보' 버전 3.0을 출시해 '부동산 정보검색', '국토 관심정보 검색', '국토이용현황검색', '국토통계'와 같은 4가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청은 지난 2010년 2월에 시작한 3차원공간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올해 1월 7일부터 항공영상·DB 및 최신자료를 교체·운영하는 등 새 단장을 통해 도민들에게 새롭게 선보였으며, 대구광역시는 '2030 대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30년의 대구의 미래 모습을 담은 도시기본계획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다.

녹색건축도시 부문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활성화를 통해 건물에너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5개 기관을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인천지역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와 16개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부문에 대한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을 발표했으며,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투자하고,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으로 보편적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전라도, 광주, 대전, 인천에서도 관련법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본 법률의 유효기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2014년 1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건축도시관련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해 해당 주체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36건의 발표자료 중 중앙부처 16건(44.4%), 지방자치단체에서 20건(55.6%)의 정책사업이 발표되었다.



중앙부처에서는 전체 16건의 정책사업 중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의 주요 시책 및 사업이 12건(33.3%)으로 주로 국토교통부에서 중점 발표하였으며,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2014년 국토부 예산 발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시적 시행 등의 정책사업이 발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 빛환경 개선으로 어두운 주택가 밝길 밝힌다’, ‘인천시,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도 시행’ 등 11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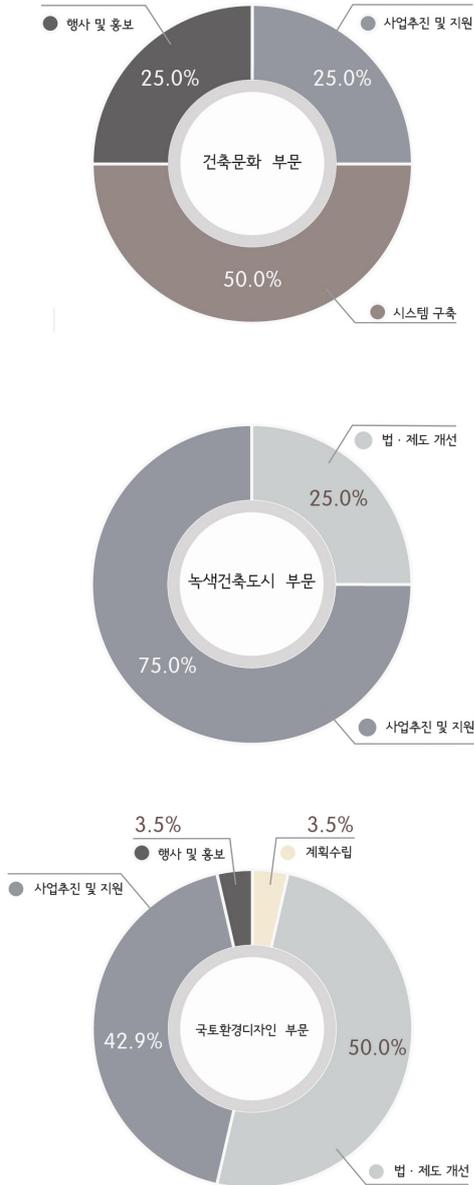
방자치단체에서 20건의 주요사업 및 시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중 가장 많은 정책사업을 발표한 부문은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으로 16건(44.4%)의 사업 및 시책을 발표한 것으로 정리된다.

주관부처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도시 부문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부문별 합계
중앙부처	2(5.5%)	2(5.5%)	12(33.3%)	16(44.4%)
합계 (중앙부처)	2(5.5%)	2(5.5%)	12(33.3%)	16(44.4%)
지방자치단체	2(5.6%)	2(5.6%)	16(44.4%)	20(55.6%)
총 계	4(11.1%)	4(11.1%)	28(77.8%)	36(100%)

■ 주관부처별 정책동향

각 부문별 세부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의 정책사업이 전체 36건 중 28건(77.8%)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발표되었으며, 분야별로는 ‘법·제도개선’ 분야 14(38.9%),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 12건(2.8%), ‘계획수립’ 분야,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 각각 1건(2.8%)이 발표되었다.

「건축문화부문」과 「녹색건축도시 부문」 부문에서는 각각 4건(11.1%)의 정책사업이 발표되었다. 「건축문화부문」에서는 ‘시스템 구축’ 분야 2건(5.6%),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와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 각각 1건(2.8%)으로 총 4건이며, 「녹색건축도시부문」에서는 ‘사업추진 및 지원’ 3건(8.3%), ‘법·제도 개선’ 1건(2.8%)으로 총 4건의 정책사업이 발표된 것으로 정리된다.



2014년 1월 한 달간 가장 중점적으로 발표된 분야는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로 총 16건(44.4%)의 사업 및 시책이 발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법·제도 개선’ 분야 15건(41.7%), ‘시스템 구축’과 ‘행사 및 홍보’ 분야 각각 2건(5.6%), ‘계획수립’ 분야 1건(2.8%)의 사업 및 시책이 발표된 것으로 정리된다.

각 부문별 세부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의 정책사업이 전체 36건 중 28건(77.8%)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발표되었으며, 분야별로는 ‘법·제도개선’ 분야 14(38.9%),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 12건(2.8%), ‘계획수립’분야,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 각각 1건(2.8%)이 발표되었다.

「건축문화 부문」과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각각 4건(11.1%)의 정책사업이 발표되었다.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시스템 구축’ 분야 2건(5.6%),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와 ‘행사 및 홍보’ 분야에서 각각 1건(2.8%)으로 총 4건이며,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사업추진 및 지원’ 3건(8.3%), ‘법·제도 개선’ 1건(2.8%)으로 총 4건의 정책사업이 발표된 것으로 정리된다.

2014년 1월 한 달간 가장 중점적으로 발표된 분야는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로 총 16건(44.4%)의 사업 및 시책이 발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법·제도 개선’ 분야 15건(41.7%), ‘시스템 구축’과 ‘행사 및 홍보’ 분야 각각 2건(5.6%), ‘계획수립’ 분야 1건(2.8%)의 사업 및 시책이 발표된 것으로 정리된다.

세부 분야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부문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분야별 합계
계획수립	-	-	1(2.8%)	1(2.8%)
법·제도 개선	-	1(2.8%)	14(38.9%)	15(41.7%)
사업추진 및 지원	1(2.8%)	3(8.3%)	12(2.8%)	16(44.4%)
시스템 구축	2(5.6%)	-	-	2(5.6%)
연구 및 교육	-	-	-	-
행사 및 홍보	1(2.8%)	-	1(2.8%)	2(5.6%)
총 합계	4(11.1%)	4(11.1%)	28(77.8%)	36(100%)

■ 세부분야별 정책동향

충남도 3차원공간정보시스템 새단장

도, 7일부터 항공영상·DB 최신자료로 교체·운영

충남지역의 공간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3차원공간정보시스템이 새 옷으로 갈아입고 도민 앞에 선보인다.

충남도는 현재 도가 운영 중인 충남 3차원공간정보시스템을 최신 항공영상으로 교체해 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3차원공간정보시스템 서비스 개편은 빠르게 변화하는 충남의 공간정보를 반영해 각종 인·허가 등 행정업무 활용은 물론, 도민들의 부동산 정보 취득 등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도는 최신 항공영상 활용 이외에도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도, 도로명주소 등의 데이터 베이스(DB)를 최신자료로 갱신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빈틈없는 유지보수 관리로 3차원공간정보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개편으로 각종 행정업무 활용과 도민 생활편의 증대 등 사용자가 만족하는 한발 앞선 행정서비스 실현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많은 이용을 부탁했다.

한편, 지난 2010년 2월부터 시작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은 항공영상과 연속지적도, 도로명주소, 용도지역도, 공시지가 등 각종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도정의 공간정보 알람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에서 배너를 클릭 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http://3dgis.chungnam.net>)를 입력해 접속하면 되고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는 (<http://m3dgis.chungnam.net>)를 입력해 이용하면 된다.



■ 충청남도 3차원공간정보시스템 사이트

2014.01.07.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공간정보담당

“일사편리” 서비스 2014년 1월 18일부터 “전국 시행”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대국민 서비스’ 전국 온라인 가동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정부3.0 선도과제로 추진 중인 부동산 종합증명 서비스를 ‘14.1.18일자로 일사편리¹라는 이름으로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온라인²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연계 한 것을 말함

¹ “일사편리”(一事便利)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정책브랜드로, 친숙한 한자성어 “일사천리”(一瀟千里)를 본따 “한장으로 편한 부동산 서비스” 의미
²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 포털 (www.onnara.go.kr)을 통해 온라인 발급

국토부는 일사편리 서비스 시행을 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13.7.17.)으로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운영”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후 시행령·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수수료 등 열람·발급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토지, 토지·건축물, 토지·집합건물)으로 구분하여 맞춤형은 1,000원, 종합형은 1,500원으로 제공되며, 기존 개별 증명서³ 합산 금액보다 저렴하게 국민에게 서비스 하게 된다.

(맞춤형) 정보 중 필요한 일부 정보를 선택하여 발급 받는 증명서

(종합형) 이력, 공유지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 받는 증명서

기존 개별 증명서 발급 비용 대비 절감 비용을 산정하면 평균 약 56%의 국민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연간 절감액으로 산정하면 약 1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국민들은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개별 민원 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담당 공무원들은 이중 삼중 처리하던 민원을 하나의 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어 행정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무의 국토정보정책관은 “새로이 시행되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정부3.0 맞춤형 국민서비스 실현을 위해 과세, 국유재산관리, 복지, 농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정보융합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부동산 통합정보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³ 토지대장(500원), 건축물대장(500원), 공시지가(800원), 토지이용계획(1,500원) 등



■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

2014.01.17.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2030년 대구의 미래 모습은 어떨까? 대구시, 도시기본계획 시민 아이디어 공모

대구시의 미래 모습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시민과 함께 그립니다.

대구시는 「2030 대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인 참여와 시민과의 소통으로 실용계획을 수립하고자 2014. 1. 10. ~ 12. 31.까지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지금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손에 의해 만들었다면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폭넓게 발굴해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을 만들 계획이다.

시민이 함께 그리는 「2030 대구 도시기본계획」은 대구의 미래상과 비전에서부터 추진 전략까지 모든 계획을 시민이 참여해 직접 그리고 생각함으로써 대구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계획의 실현성



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도시공간구조(2도심, 4부도심) 재진단을 통한 체계정비, 도시철도 역세권 활성화 등을 위한 상업지역의 합리적 정비, 행정단위 생활권에서 시민행복단위 생활권 등 행복도시로 대구가 나아가길 20년 후 미래의 대구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시민 아이디어는 대구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으며, 우편·이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시민과 함께 그리는 2030 대구 도시기본계획 시민 아이디어 공모'란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충분히 검토한 후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해 도시의 미래상과 핵심이슈 과제로 선정하는 등 도시기본계획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시민아이디어 공모와는 별도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가칭" 「시민 참여단」을 공개 모집해 구성한 후 전문가와 함께 대구의 미래상과 발전방향, 대구가 추구할 가치를 직접 그릴 계획이다.

한편「2030 대구 도시기본계획」은 오는 7월에 착수해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 도시 공간 구조의 설정,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해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16년 2월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대구시장은 "대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고 원칙이 되는 도시계획인 만큼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은 아이디어 공모에 적극 참여해 대구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4.01.14.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내손 안에 「스마트 국토정보」 버전3.0 출시

터치 한번으로 실시간 정보조회, 비교분석까지 OK!
부동산정보검색, SOC정보, 국토이용현황분석, 국토통계 등
4가지 서비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년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약 1,330만(월 약54만)건이 조회되는 등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마트 국토정보의 새로운 버전3.0을 1월 28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스마트국토정보3.0 모바일 앱」은 새로운 버전 안드로이드 및 iOS 기반의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국토이용현황분석, SOC정보 등을 이용하여 국민 누구나 토지대장, 거주민 구성, 상권분석 등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총 4가지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된다.

① (부동산 정보검색) 강화된 '부동산 정보 검색' 기능 메뉴 선택 시 현 위치의 부동산정보가 자동으로 구동되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지목, 면적, 공시지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② (국토 관심정보 검색) 국내 주요 시설물(도로, 철도, 공항, 항만, 하천, 댐, 혁신도시 등)에 대한 공간정보(항공사진과 상세 속성정보 등)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혁신(행복)도시의 경우, 사업진척 현황(위치도, 조감도, 정부세종청사, 주택 건설 현황 등)과 개발 계획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③ (국토이용현황분석) 지역별, 범위별 선택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면적, 필지수 등), 주택(단독·공동주택 현황), 거주자(인구수, 세대수, 연령별 현황, 세대구성 현황 등)에 관한 상세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한다. 두 개 지역을 선택할 경우 비교분석도 가능하다.

④ (국토통계) 지적통계 2종만 제공하던 기존 앱의 기능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통계지표 순위에 따라 총11종(주택보급률, KB주택가격동향, 주택미분양현황, APT 실거래지수 등)의 다양한 국토관련 통계지표가 그래프와 함께 제공한다.

'스마트 국토정보3.0'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기기의 App Store(아이폰),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Tstore(SKT), olleh마켓(KT), U+앱마켓(LGU+)에서 '스마트 국토정보 앱'을 다운받아 실행하면 된다.

2014.01.28.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도 시행

건축물 거래시 에너지효율을 비교해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 선택 가능

인천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인천지역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란 건축물의 매매·임대시 에너지 소요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비교해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20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는 녹색건축 포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를 통해 무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린투게더'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31조 제2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초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제도기간(2014. 1. 1. ~ 12. 31)이 운영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에너지소비 증명제도의 시행으로 건축물의 매매와 임대시 매수인과 임차인에게 건축물의 객관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의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해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1.02.

.....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새고 있는 건물에너지! BEMS로 스마트하게 잡는다!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설치로 10~30% 에너지 절감

국가 총에너지 사용량의 21%⁴를 사용하는 건물부문에 건설기술(CT)·정보통신기술(IT)·에너지기술(ET)을 융합한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보급을 활성화하여 건물에너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행을 위해 마련한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보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 되어 있으며, 8일(수) 제2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보고하였다.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개요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조명,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콘센트 등)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 에너지원별(전력·가스·연료 등)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 수집된 에너지사용 정보를 최적화 분석 S/W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스템

국내의 사례를 통해 BEMS 설치 시 10~30%의 에너지절약 효과⁵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건물에너지 효율화로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려는 시장수요가 증가하여 향후 BEMS시장 급성장⁶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CT)·정보통신기술(IT)·에너지기술(ET)이 융합된 BEMS를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로 육성하여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BEMS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기술표준화 및 인증기반 마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보급촉진 및 신규시장 창출 등 3개 분야의 6개 실

⁴ 선진화 될수록 건물에너지 사용비용 상승 (선진국은 약 40%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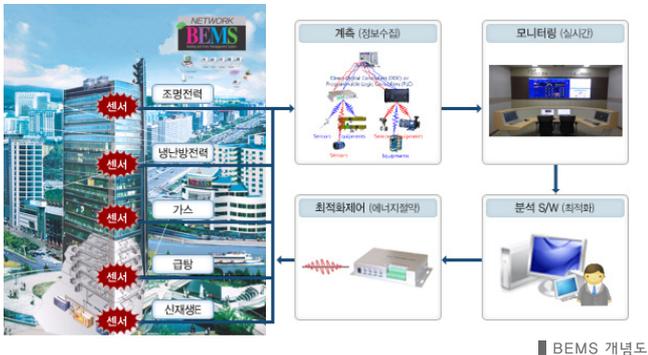
⁵ '12년 국토부 시범사업(3개소 평균 10%), 일본 BEMS도입 WL원사업(11.1%) 등

⁶ 해외 전문 리서치보고서(美, 네비건트리서치, '13.7)에 의하면 시장규모가 '12년 2.1조원(18억불)에서 '20년 6.7조원(60억불)로 연 15.6%씩 급성장 예상

천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기술표준화 및 인증기반 마련’을 위해 BEMS KS규격을 개발·제정하여 기술을 표준화하고, BEMS 인증제를 도입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관련산업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 ②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BEMS 인프라 기술과 통합·군(群)관리시스템 등 BEMS 운영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R&D를 추진하고, 건축·설비·IT분야 융합 과징인 건물 에너지관리 특화과정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③ ‘보급촉진 및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 세계감면, 보조금 시범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BEMS 도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해 건축물과 BEMS 전문 관리자를 연계시킨 ‘BEMS 원격 광역관리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ISO 등 국제표준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BEMS가 다양한 분야간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으며, BEMS보급 활성화를 통해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물에너지 관리분야가 스마트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서비스분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BEMS 개념도

2014.01.08.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대전시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거듭 난다

에너지 시설개선 7개 기관 28억, 사회복지시설 5개소 6억 투자

대전시가 국가 에너지난 극복과 친환경 녹색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에 사업비 34억 원을 투자하여 시 청사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 공급 시설을 개선(28억 원 투자)하고, 사회 복지시설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6억 원 투자)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에너지 시설개선 사업

- (대전시 청사)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및 지하수 이용한 냉·난방 개선
- (중구 청사) 열손실 저감시설 설치
- (대덕구 청사) 단열창호 설치
- (한밭도서관) 공기조화기 교체
- (노은농수산물시장) 조명교체

○ 사회 복지시설 친환경 고효율 조명 설치사업

대전시립정신병원, 제2시립노인병원, 시립체육재활원, 유성구 장애인종합명원, 유성구 노인복지회관

대전시는 앞으로 고효율 에너지 시설 확대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생활문화 정착유도를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그동안 온실가스 절감 및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2008년부터 약 170억 원을 투자하여, 승용차요일제 이행 확인 시스템구축, LED교통신호등 보급, 공공청사 시설개선 등 45개소의 고효율 에너지 시설개선을 완료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20억 원의 냉·난방 연료비를 절감하고, 약 7,500톤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발생을 방지하여 1,300여 그루의 나무 식재 효과를 거둔 바 있다.

2014.01.20.
대전광역시청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추가 지정

인증수요 증가 대비,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5개 기관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5개 기관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추가 지정 인증기관

연번	명칭	대표자
1	사단법인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이호진
2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경희
3	사단법인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손학식
4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주식회사	김익수
5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권진봉

현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 인증기관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총 9개 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확대 및 향후 에너지 소비증명제의 본격 시행으로 인증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기관은 부족하여 인증지연이 우려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인증기관을 적기에 추가 지정함으로써 인증처리 지연 등 불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지정된 인증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와 인증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고 운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신규 인증 전문 인력 교육을 이수한 후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본격적인 인증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2014.01.22.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20.9조 원으로 확정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 중점 투자

국토교통부는 '14년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940억 원 증액된 20.9조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전년(22.0조 원)에 비해 5.0% 감소된 규모라고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침체된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투자규모를 유지하면서,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와 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사업 등이 주로 증액되었다.

■ 연도별 국토교통부 예산 추이
(단위 : 조 원)

부문	'06	'07	'08		'09		'10	'11	'12	'13	
			본 예산	추경	본 예산	추경				본 예산	추경
국토부 예산	18.1	17.6	16.8	17.7	21.9	22.6	21.3	20.9	20.0	21.3	22.0

국토교통부는 전년보다 예산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생활밀착형 SOC예산 등이 상당 부분 보강됨에 따라 SOC 투자에 따른 국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은 아래와 같다.

[① 국민체감형 지역균형 발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13년까지 구축하고, 올해부터 선도사업(11개)을 본격 추진한다.(306억 원)

해안권 발전사업(350억 원) 등 지역성장거점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275억 원)를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등 3개 우선사업 지구 공사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②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296억 원)를 새롭게 추진하고, 서민

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500억 원)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지원(1,250억 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효과

	대상규모	연 예산(국비)	월평균 지급액
현행 (주거급여)	73만가구	5,692억 원	8만 원
개편이후	약 97만 가구	약 1조 원	약 11만 원

아울러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사·용역계약의 전문상담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 지원센터⁷(5억 원)도 새롭게 설치한다.

[③ 빠르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호남고속철도(11,587억 원)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3,939억 원)를 개통하고,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 원)도 '15년 완공을 위해 중점 투자한다.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00억 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 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 원) 등 5개 도시(광역)철도⁸ 등도 새로이 추진하고,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⁹을 통해 출퇴근 교통 불편을 완화한다.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저상버스(862대, 378억 원) 및 장애인 콜택시(281대, 55억 원)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교통오지 불편해소 등을 위해 울릉·흑산도에 소형공항 건설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울릉도 : 20억 원, 흑산도 : 15억 원)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택시산업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택시감차 보상(56억 원)을 통해 택시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운송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CNG 개조(6억 원)와 충전소 설치(3억 원)를

⁷ LH공사 산하 주택관리공단에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전문가의 상담과 분쟁조정 지원

⁸ 상일-하남 복선전철(240), 광교-호매실 복선전철(3), 광주도시철도 2호선(52), 대전도시철도 2호선(10)

⁹ 혼잡도로 개선(생활교통혼잡도로 계획수립비 10억 포함) : 1,290('13) → 1,423억원('14)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④ 국민 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교통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도심 내 헬기사고 등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장애표시등을 점검·관리(1억 원)하고, 제2항공교통센터를 본격 착공(대구, 120억 원) 하는 등 항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0.8억 원) 및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 원) 도입 등 철도안전투자를 확대한다. ('13년 2,732 → '14년 3,067억 원)

또한 수도권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 원)을 추가로 건립하여 체험형 학습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7년까지 30% 줄일 계획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 '12년 2.34명 → '17년 1.64명)

재해에 취약한 하천의 시급한 정비를 위해 지방하천정비(7,653억 원)와 국가하천정비(4,281억 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댐에 1,367억 원을 투자하며,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재해취약성분석(3억 원)도 새로이 시행한다.

[⑤ 미래대비 투자 등 신성장동력 발굴]

공간정보와 교통정보를 IT·모바일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부동산 입지여건 등을 인터넷 3차원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223억 원), 교통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30억 원)도 새로이 추진한다.

※ 국토교통분야 R&D투자 확대 : '13년 4,014 → '14년 4,110억 원

또한 건설산업의 해외진출지원 강화를 위해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14.2월 출범)를 새롭게 설립(4억 원)하는 등 해외건설시장 개

척사업¹⁰도 중점지원 한다.

[⑥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 건설(8,000억 원) 등 2개의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 원) 등 8개 도로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억 원) : '13년 9,475 → '14년 11,491억 원

또한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15.4, 대구·경북)를 차질없이 지원(75억 원)하고, 세계도로대회('15.11, 서울) 개최도 지원함으로써 국제 위상도 제고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를 통해 SOC 투자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고,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상반기까지 64%)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관리를 통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14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 현황(국회 확정)
(단위: 억 원, %)

부 문	'13예산 (A)	'14년 예산		증감		'13년 대비 (C-A)/A
		정부안 (B)	최종 (C)	금액 (C-B)	정부안대비 (B-A)/A	
합 계	220,205	205,176	209,116	3,940	1.9	△5.0
도 로	89,344	82,954	83,912	958	1.2	△6.1
철 도	61,380	59,810	61,799	1,989	3.3	0.7
도시철도	7,761	6,103	6,233	130	2.1	△19.7
항공·공항	830	1,004	1,007	3	0.3	21.3
물류 등 기타	12,159	12,615	12,684	69	0.5	4.3
수자원	27,694	23,512	23,830	318	1.4	△14.0
지역 및 도시	8,034	7,842	7,978	136	1.7	△0.7
산업단지	9,742	8,964	8,991	27	0.3	△7.7
주택	3,260	2,372	2,682	310	13.1	△17.7

¹⁰ 해외건설시장 개척 : 108('13) → 148억 원('14), 글로벌인프라펀드 : 120('13) → 132억 원('14)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주택기금 : (13년) 17.2조(추경제외) → (14 정부안) 18.0조
→ (14 최종) 18.0조(△ 318억)

■ 국회 심의 시 주요 증액 사업
(단위 : 억 원)

사업명	정부안	증액규모	최종	비고
주택바우처시범사업	236	60	296	기초 조사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개선(그린홈)	400	100	500	시설개선 사업비
지적재조사	30	50	80	지자체 보조 사업비
도시재생	243	63	306	선도지역 개수 증가(8→11)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관리	1	1	2	항공장애등 설치
해외건설시장개척	141	7	148	정책지원센터 등
물포럼 개최지원	63	12	75	행사비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	100	100	기본계획 수립비
상일-하남 복선전철	140	100	240	착공비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120	106	226	기본계획 및 설계비

2014.01.02.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

대구시, 저소득층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출발'

同苦同樂 1,000개의 약속 사업과 행복동지 만들기 사업 추진

대구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업, 기관·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노후주택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同苦同樂, 1,000개의 약속(사랑의 1000호 집수리사업)』과, 저소득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행복동지 만들기 사업』 등이다.

먼저, 대구시가 작년부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1000호 집수리사업』을 『同苦同樂 1,000개의 사랑』으로 명명, 작년 400호에 이어 올해도 300호 달성을 목표로 재원모금과 대상

주택을 선정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역의 개인, 기업, 기관·단체, 공공기관 등이 직접 집수리에 참여하거나 현금지원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주거생활 필수시설을 수리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참여 기업, 기관·단체와 노후 지역 간 결연을 추진해 지속적인 집수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으로 『행복동지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 임대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와 에너지 절감형 기기를 보급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사업』과, 입주예정자로 선정돼도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을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 내에서 희망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기존 다가구나 원룸 400호를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사업』을 국민주택기금과 기금융자금 등 25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 밖에도 중위소득 43%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매월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어려운 주거환경에서 고생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시민 행복 도시로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同苦同樂 『1,000개의 사랑(사랑의 1,000호 집수리)사업』에 시민, 기업, 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4.01.03.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부산시, 마을만들기 사업 특별교부세 23억 8천만 원 확보 감천문화마을을 비즈니스 지원센터 건립비 7억 원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23억 8천만 원 확보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올해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14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등 부산의 마을만들기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특별교부세 23억 8천만 원 교부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결정으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활기찬 창조경제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가동 중인 마을만들기 자립프로젝트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먼저, 감천문화마을에서 주민들이 요청한 ‘감천문화마을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비’로 7억 원이 지원돼 노인일자리 제공과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공동체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구 남포동 건어물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로 7억 원이 지원돼 대형관광버스 진입·출입로 확보는 물론 보행안전 위협에 시달린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아울러, 동구 초량동 하천 및 복개구조물 보수·보강비로 9억 8천만 원이 지원돼 복개구조물 노후화로 슬래브 및 벽체 균열, 철근노출, 콘크리트 파손 세굴 등 재해위험 요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 등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14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1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했다. 이어, 시청 녹음광장에서 열린 마을만들기 품마켓 및 마을기업 장터, 감천문화마을 방문 등 온종일 부산의 마을만들기 현장을 누비고 다니며 부산형마을만들기 사업을 살피고 주민들을 격려한 바 있다.

2013.01.07.

.....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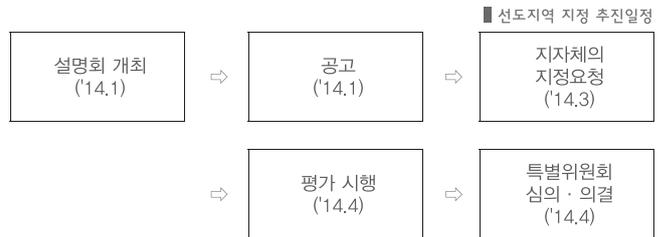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착수

4월 11곳 지정, 4년간 경제기반 250억원, 근린재생 10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1월 9일(목) LH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한국형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선도지역 공모사업의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13일(월) 선도지역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작년 12.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첫 도시재생 사업이다.

공모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선도지역 11곳(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곳)이 선정된다.



(도시경제기반형) 경제회복효과가 큰 핵심시설 등의 정비·개발과 연계하고, 복합적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부여 및 용기반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250억 원 지원

(근린재생형)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100억 원 지원

(소규모사업) 국비지원 비율을 60%로 상향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50%이하 사업)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이를 위해, '14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예산으로 선도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비 및 사업비 등의 지원을 위해 306억 원이 반영되었다.

평가항목은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주민·지자체의 추진역량,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며,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등에 따라 가점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역 지정 공모가 시작됨에 따라 주민·지자체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01.09.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 해외진출 지원, 실효성 높아진다!

외국공무원 상주 상담 및 지원센터
(해외도시 개발 지원센터 내)운영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외국공무원이 상주하며 해외도시개발과 관련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상담 및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 센터는 외국공무원이 자국의 도시개발과 관련한 정책동향, 제도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해외도시개발에 관심 있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며,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에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외국공무원은 미얀마, 몽골, 콜롬비아 국적으로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내소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32)에 상주하면서 자국의 도시개발관련정책 및 정보 등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할 예정이다.

이번 상담기간은 방학기간(14년 1월 13일~2월 21일, 월~금)이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다. 상담 희망을 원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해외도시개발센터에 사전에 유선으로 예약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도시개발에 관심이 있는 민간 기업이 현지에

가지 않고도 현지 발주계획, 현지 도시개발의 제도, 사업수행 시 애로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등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해외건설 업계의 반응과 운영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시 확대·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1.13.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서울시, 빛환경 개선으로 어두운 주택가 밤길 밝힌다 빛 디자인으로 안전한 야간활동, 에너지절약, 생태계보호 등 효과 이룰 것

송파구 가락동에 사는 7씨는 퇴근 후 귀가할 때 집앞 골목이 너무 어두워서 늘 불안했다. 그런데 LED 보안등으로 바뀐 후 보도 바닥까지 환해져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붉은색 조명이 온 백색으로 바뀌어 시야도 더 넓어지고 사물도 더 잘보이게 됐다.”

강서구 화곡본동에 사는 2씨는 커튼을 쳐도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보안등 불빛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그렇다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보안등을 끌 수도 없는 노릇. 그런데 보안등이 빛이 퍼지지 않는 컷오프형 LED등으로 교체된 후엔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크게 줄어 수면장애가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작년 한 해 꼭 필요한 곳에만 충분한 양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어둡고 안전에 취약한 81개동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기존 나트륨보안등(100w) 총 6,382개를 컷오프형 LED보안등(50w)으로 교체했다.

이중 30곳을 선정해 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30곳 모두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했고 도로 바닥 주변 밝기는 기존보다 3배 이상 밝아져 어두웠던 주택가가 대폭 개선됐다. 아울러 친환경 고효율 LED보안등으로 교체 후 서울지역 433여 가구(4인 기준)의 연간 사용 전기량과 맞먹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3년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개선 효과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13년 2월 시행)과 관련, 환경부의 국고보조 시범사업으로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게 됐다. 빛공해란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는 빛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의미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의 기본 취지는 필요한 빛은 충분히 제공하되, 사람이나 동·식물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좋은 조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존에 설치됐던 확산형 고압나트륨보안등은 사방으로 빛이 퍼지는 식이라 허공만 밝고 보도바닥은 오히려 어두워서 안전에 취약했고 에너지가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인근 주거지 창문으로 빛이 들어가 수면장애를 유발하기도 했다.



■ 주택가 골목길이 어두워 안전 취약



■ 빛공해 유발·에너지 과다 낭비

이에 서울시는 안전이 취약한 어두운 골목길, 보안등이 노후해서 에너지 낭비가 심한 곳, 주택 창문으로 빛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곳,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교 주변과 재래시장 인근 등을 교체 대상으로 선정했다.

〈30곳 대상 개선효과 조사.. 빛공해, 안전보행, 에너지절감, 주민만족 4개 분야〉

서울시는 지난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이번 사업을 시행한 20개 자치구에서 각 1~3개소를 선정,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를 조사했다. 시는 한국조명연구원과 빛공해방지위원회에 의뢰해서 △빛공해를 얼마나 해소했는지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됐는지 △에너지절감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주민들은 만족하고 있는지 등 4개 분야에 대해 측정·조사·분석했다.

〈창문 유입 빛의 양 전체조사대상 10룩스 이하.. 상향광 등 빛공해 요인 크게 개선〉

우선, 빛이 퍼지지 않고 아래를 향하는 컷오프형 LED등기구로 교체해서 빛공해를 유발하는 상향광, 전사광, 후사광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위로 퍼지는 상향광 문제는 거의 해소됐다. 주거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밝기 역시 측정대상 30개소 모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규정하는 10룩스 이하로 측정됐다. 예컨대, 이번 사업지역 중 한 곳인 성동구에선 보안등 개선 후 상향광 손실이 없어지고 전사광, 후사광도 개선돼 주거지에 침입하는 빛의 밝기가 규정치의 20% 정도인 2.2룩스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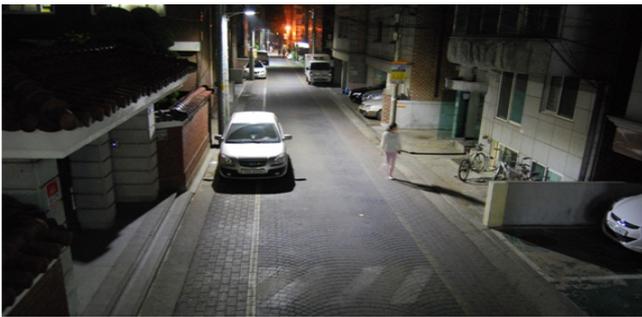
〈노면 밝기 2~3배 높게 나타나 보행자 안전확보 및 교통사고, 범죄발생 감소 기대〉

붉은색 계열이던 나트륨등을 온백색계열의 LED조명으로 교체한 후 이전보다 멀리서도 대상을 식별할 수 있게 됐고 물체 본연의 색을 더 잘 볼 수 있게 돼 야간에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개선 전(나트륨 100w, 붉은색 계열)



■ 개선 후(LED 50w, 은백색 계열)

아울러 조사 대상지 모두 야간 보도바닥 기준조도인 3~5룩스보다 크게는 7배가량 더 밝은 평균 20룩스로 측정돼 이전보다 골목길이 환해졌다는 평가다. 눈부심이 적은 은은한 조명 덕분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야간 시야가 더 넓어져 교통사고율과 야간 범죄 발생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 노면밝기 측정결과 자료(성동구 성수1가 2동)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조도(lx)	3~5 lx	19.3 lx
시인성	시인성 낮음	시인성 높음
연색성	40 Ra	77.6 Ra
색온도	2,800 K	5,448 K

〈56% 이상 에너지 절감효과.. 433가구(4인기준) 연간 사용가능 에너지량 맞먹어〉

빛이 사망으로 확산되는 조명을 한 곳을 비추는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해 교체 전 연간 2,946MWh이던 20개 자치구 총 에너지사용량이 1,281MWh로 약 56.5%(1,665MWh) 줄어들고 석유 환산톤 연간 383[TOE]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의 경우 나트륨등을 사용할 땐 에너지사용량이 연간 125,870kWh였는데 LED등으로 교체 후엔 54% 감소한 57,213kWh로 조사됐다.

〈골목길 밝아지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줄어 수면장애 개선 등 긍정적 평가〉

한편, 조사기간 중 만난 주민들은 특히 야간에 골목길이 더욱 밝아진 점과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많이 줄어 수면장애 등이 개선된 부분을 가장 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붉은계열 대신 은은한 백색계열 조명으로 바뀌어 눈 피로가 덜하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

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가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보안등 개선사업을 도입하고 이번엔 조사한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빛공해와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빛환경 정책을 추진할 때 이번 사업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계획한다는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관은 “주택가 보안등부터 눈부신 대형 전광판과 현란한 네온사인까지, 서울은 그야말로 빛의 도시”라며 “서울의 밤을 밝혀주는 빛을 잘 디자인해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활동 보장, 에너지 50% 이상 절약, 수면장애 해소, 생태계 보호 등 여러마리의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2014.01.14.

.....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1.13일 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 시행

전월세난 속에서 여·야 합의로 지난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세제를 망라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조세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1일부터 시행된데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입자금 용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임대사업자가 손쉽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소득 등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여, 임대사업에 따르는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준공임대주택 사업자 또는 사업예정자는 주택을 매입하고 개량하기 위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매입자금)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대 당 7,500만 원(수도권은 1억5천만 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용자(10년 만기 상환하되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개량자금) 20년 이상 경과한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세대 당 2,500만 원(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 원)의 자금을 용자(만기연장은 불가)

또한, 조세감면도 종래의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비해 확대 된다.

○ 준공공임대주택 조세감면 혜택

-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0년 보유기준 30% ⇨ 60%
- 소득세·법인세(임대소득): 감면 없음 ⇨ 20% 감경
- 재산세(전용면적 40㎡이하): 50%감경 ⇨ 면제
- ※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세제지원 시행을 계기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전판이 마련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4.01.13.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및 330㎡이하 다가구주택 등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축법령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월 17일부터 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부 대상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2)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3)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되며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축하는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내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약 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아 시민의 주거환경 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일조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각 시도와 대한 건축사협회를 통해 양성화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비도 시민의 부담을 고려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1.14.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오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광주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토록 요청하고, 특별조치법 시행이 완료되는 내년 1월까지 각 자치구 추진 실적을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2014.01.15.

광주광역시 국토환경디자인

전라남도,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회 준다

특별조치법 17일부터 시행...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전라남도는 그동안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지거나 대수 선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차주경 전남도 행복마을과장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위법 건축물 3천912건 중 약 1천100건이 주거용 건축물"이라며 "그동안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을 포함하면 대략 3천여 건의 건축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4.01.12.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대전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건축허가·신고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구제가 시작된다

대전시는 본 법률의 유효기간 2015.1.16. 까지임을 한번 강조하면서 앞으로 시, 구, 지역건축사회가 의견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14.01.17.

대전광역시청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광주시, 주거용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주거용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건축법을 위반한지 1년 이상 됐지만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

경상남도, 건축법위반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년간 한시적 시행

경상남도는 2014년 1월 17일부터 건축법을 위반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지영오 건축과장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가슴앓이가 컸던 도내 약 2천여 가구에 대한 사유재산 보호의 길이 열려, 도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본 법률의 유효기간이 2015년 1월 16일까지(신청접수 마감 2014년 12월 16일 예정)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도, 시·군, 지역건축사회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선량한 도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14.01.17.

.....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건축과

인천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및 330㎡이하 다가구 등

인천시는 그 동안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 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금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약 2,5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군·구 홈페이지 및 반상회 게재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각 군·구에서 특정건축물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1.23.

.....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 ② 국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 집중투자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중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은

SOC 예산 감소 추세에 따라 그 규모가 '13년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다만, 도시재생(5억→306억), 노후산단 재정비(43억→275억)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쇠퇴하는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지역 개발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 효과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 지역경제 회복지원 사업 강화

【 주민체감형 도시재생사업 본격추진 】

'14년 1월 13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13년 5억→'14년 306억)된다.

금년에는 11개 내외의 선도지역 사업(경제기반 2, 근린재생 9)을 추진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0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13년 1,086억 → '14년 1,032억, 지자체가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사업)은 그간 집행부진 등으로 주민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생사업 착공 】

'09년 선정한 1차 지구(4개) 중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한 전주(제1산단), 대전(제1·2산단)은 금년부터 간선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단 재생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또한, 대구(제3공단, 서대구공단)는 '15년 재생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재생시행계획을 수립(30억 원)하고, 부산(사상공단)은 금년 중 재생계획을 수립(20억 원)하여 하반기 중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소규모 상가 임대정보 제공으로 지역경제 지원 】

'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의 임대료·수익률 등 임대사례자료를 조사·발표해 왔으나, 상업용부동산 중 소규모 상인들이 선호하는 '집합건물'에 대한 임대사례정보는 없어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금년부터는 집합건물(2.3만호)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조사·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창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도 수준(766억)이나, 도로개설 등의 단순 SOC 사업보다는 생활 밀착형 '소득증대사업'(주말농장 등)과 '복지증진사업'(커뮤니티 센터 등) 등에 중점을 둘 계획(세부계획 1월 확정)이다.

2. 지역성장 거점육성 사업의 실행력 제고

(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 중 일부 산하기관은 종전부동산 매각 지원 등으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이차보전 지원(36억 원, 신규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기 이전을 유도하여 지역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해안권·내륙권) '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안권·내륙권 시범사업은 금년 중 완공하고, '13년부터 추진하는 해안권 선도사업(본사업)은 본격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신규로 계획 중인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0년 마련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헬스케어타운·서귀포관광미항 진입도로 사업의 '15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14년 62억)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의 투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JDC의 경영내실화 등 제도개선* 사항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도시)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사업은 '16년 완공할 수 있도

록 투자('14년 18억 원)할 계획이며, 기업도시협의회(시행사, 지자체 등)를 운영하여 개발 중인 기업도시의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역성장 거점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시행하여 투자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1.14.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 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으로 보편적 주거복지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들어 「4.1 대책」, 「8.28 대책」을 바탕으로 주거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자 주도→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편적 주거복지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주거급여 개편 등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에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14년) 66,781억 원

무주택 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되, 행복주택 건설,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직주 근접의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한다.

【행복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14년) 38,370억 원

공공건설임대주택 준공 물량은 약 5만호로서 '13년(3.7만호)보다 17% 확대할 계획으로,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약 2만 2천호, 공

공공임대주택(5~2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은 약 2만 8천호를 준공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승인 물량은 약 6만 4천호로서 '13년(5.6만호)보다 14% 확대된다.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도 본격적으로 공급하여 약 2만 4천호를 사업승인 할 계획이며,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약 4만호를 사업승인 할 계획이다.

【매입·전세임대】: ('14년) 28,411억 원

수혜자 중심의 보편적 주거복지 이행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매입 또는 전세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4만호 공급한다.

이중 3천호는 대학생용으로 공급*하여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1월 3일부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입주민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주거급여 개편으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을 강화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개편 주거급여 시행】: ('14년) 시범사업 등 지원예산 296억 원, 본사업 예산('14.10~12월) 2,340억 원

금년 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던 주거급여

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 → 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도록 개편하여 주거비 지원 기능을 강화(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8 → 11만 원)한 것이 특징으로 특히,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¹¹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급하므로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어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보완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년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거주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주거급여법」 통과('13.12.31. 국회의결)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대상가구(97만)의 임대료 수준 등에 대한 주택조사 및 조사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착수하였고, 7월부터 3개월간 기준수급자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도 개편을 위해 시범사업 등 지원예산 296억 원 및 금년 10월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 2,340억 원(10~12월, 3개월)이 편성되었으며, 자가거주로 확대되는 '15년에는 1조 원 수준이 소요될 전망이다.

【주택기금 저리 구입·전세자금 지원¹²】: ('14년) 15.7조 원

'13년에는 역대 최대인 약 26만 호(17.1조 원)에 저리 구입·전세자금이 지원되었으며, '14년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최대 약 24만 5천 호(15.7조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연초에 출시한 통합 정책목기지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10만 5천 호(9

¹¹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 10~34만원 수준

¹² '08 ~ '12년 연 평균 지원실적은 17.9만호(6.1조 원)



조) 지원하고, 작년에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공유형 모기지는 본 사업으로 확대하여 1만 5천 호(2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무주택 서민(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완화를 위해 저리 전세자금을 12만 5천 호(4.7조 원) 지원한다.

■ 국민 체감형 정책 강화

【주거환경개선】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비 지원 등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4년 예산인 1,250억 원¹³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한편, 정비사업 관련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간다.

아울러,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500억 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 강화】

민간위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 분쟁 및 갈등중재, 시설 관리 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5억)하였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10.47억)하여, 입주민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하자 여부를 판정받고, 소송 없이도 하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동주택 정보관리시스템(K-apt), 주택 공급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등의 운영도 지속하여 국민의 주거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7억)

2014.01.17.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¹³ 예산추이(억 원) : ('10) 120 → ('11) 500 → ('12) 850 → ('13) 1,800 → ('14) 1,25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포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 서비스 근거 마련 등

국토교통부는 서민생활 밀접시설(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1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제7조의2제1항)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층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

2.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 마련(안 제33조의4)

1·2층시설물 외 시설물 중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를 위해 그 대상을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외에 전통시장,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시설물로 범위를 확대하며, 수량도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다.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무상으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금년에는 1,700여 개소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15년부터는 총 15,000여개 대상으로 연간 3,000개 소씩 5년 주기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2014.01.14.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착수

한국형 도시재생 성공모델 창출 및 다양한 성공사례 후속사업 확산

전라북도에서는 쇠퇴한 원도심 재생 및 한국형 도시재생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지역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작년 12. 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 주민·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국비지원 첫 도시재생 사업이다.

도시경제기반형은 경제회복효과가 큰 핵심시설 등의 정비·개발과 연계하고, 복합적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부여 및 고용기반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250억 원(지자체 250억 원 매칭)이 지원된다.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100억 원(지자체 100억 원 매칭)이 지원된다.

또한, 소규모 사업(총 사업비의 50%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비율이 60%로 상향 지원된다.

그동안 전북도에서는 도시재생 특별법 및 선도지역 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3년부터 기초자원 발굴조사, 시군 합동워크숍, 전문가 정책자문, 전발연 정책연구과제 등을 추진해 왔다.

전주 한옥마을과 전통 한류문화, 군산 내항 및 근대역사문화, 익산

역세권 등 우리지역만의 특화된 장점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군과 적극적인 협력, 전발연·학계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개소 이상 공모사업 선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선도지역 공모 이후 일반지역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위해 시군별 용역예산 확보 및 조례제정,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등 법안 후속조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선도지역 공모가 시작됨에 따라 주민·지자체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주변 지역과 후속사업으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01.16.

.....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대책 본격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공포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 준주거, 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또한,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무역투자진흥회의(7.11, 9.25)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 용도지역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현행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빠른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시공간의 융·복합 이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 완화

입지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는 용도지역에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업무, 판매, 문화, 관광시설 등의 입지가 완화된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지자체가 특별히 조례로 제한하지 않으면 생활숙박시설(서비스 레지던스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준주거지역에 주로 입지해 있는 기존 오피스텔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 가능해진다.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등의 관광휴게시설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준주거·준공업지역 등에서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은 지자체별로 허용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조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

그 밖에,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이나 전통사찰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고, 전용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된다.

③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보전관리지역 포함 허용

현재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보전관리지역도 공원·녹지로 계획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전체 면적의 10~20%¹⁴ 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정형화하여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며, 주변과 연계된 체계적 개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방재지구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¹⁵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 재해가 10년 이내 2번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저감대책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가 구역 면적의 5%에서 10%로 확대되어, 계획의 변경이 용이해진다.

이번 개정안 중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1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2014.01.17.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복주택 부지와 건축기준특례 구체화

국토교통부는 「보급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면서 행복주택특례를 규정한 법률 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 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7일부터 40일간(1.17~2.25)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¹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체 면적이 10만㎡이하인 경우 20%까지, 10만㎡를 초과하는 경우 10%까지 포함 가능

¹⁵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 120%,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 150%까지 완화 가능

(행복주택 부지) 행복주택지구가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며,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추진 등을 고려하여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 등을 2분의1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다.

(건축기준 특례) 철도부지, 유수지 등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을 할 때 건축면적에서 인공대지를 제외하고, 인공대지의 조정면적을 대지의 조정으로 보도록 하며, 공원 및 주차장을 기존법령에 의한 기준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공유지 사용) 행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철도부지 등의 사용·대부 또는 점용료 요율을 국·공유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14. 3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4.01.17.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신규적용 시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¹⁶ 적용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규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¹⁶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건축을 허용,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공급 범위)을 위한 시행령 규정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뉴타운 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주택 비율은 도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20~50%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지역의 경우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아울러 작년에 개정·공포(13.7.16)된 도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신규로 적용된다.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1.17.

국토교통부 주택정책비과

환경·국제기구도시 위상에 걸맞은 옥외광고물 추진

2014 옥외광고물 종합추진계획 수립

인천시가 환경도시, 국제기구도시 위상에 걸맞은 도시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간판문화 선진화 등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2014 옥외광고물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시달하고, 국제도시 수준의 면모를 갖춘 인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인천시는 올 해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인천AG, 장애인 AG 등이 개최되는 만큼 대시민 주요 역점사업중 도시미관 분야의 현안 과제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선정해 평가할 방침이다. 또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주요 행정지원 과제로 추진하는 등 가시적인 추진 성과를 거두기 위해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 및 ZERO화 정비체계를 구축해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매월 10개 군·구의 옥외광고물 정비 실적 및 행정처분 실적을 점검하고, 분기별로 평가한 후 연말 각종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우수 군·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3억9백만 원과 고정광고물정비 1억5천만 원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예산 4억8천4백만 원을 군·구에 지원해 깨끗한 거리 조성에 앞장선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해 안전행정부의 옥외광고업무분야 전국시·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2월부터 인천AG 및 장애인AG 종료 시까지 자체 특별순찰반을 편성해 경기장 주변 및 주요 도로변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지난 해 8월 간판 추락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표시기간 경과 불법옥외광고물 42,623건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1.17.

.....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추진단

‘충청남도 건축 관련 기본계획’ 전문가 의견 청취

21일 제1차 전문가 TF팀 회의 개최...3개분과 운영계획 논의

충남도는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건축·도시분야 전문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17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건축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전문가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도 건축도시 환경의 중장기 비전과 부문별 목표 설정,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도출 등을 통해 충남도 건축관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지역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TF팀의 첫번째 회의로서 △향후 진행될 분과별 TF 운영계획 △도 건축·도시 관련 1차 현황분석 결과에 대한 공유 및 추가 조사방향 자문 △분과별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분과별로는 ‘공간복지디자인’ 부문에서는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 △마을 만들기 △지역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경관형성 △공공디자인 개선 △지역 간 개발격차 완화 등을 논의했다.

또한, ‘녹색건축 및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설정 △녹색건축 기준 및 제도정비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녹색건축 기반구축을 위한 계획방향을 논의했다.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지역의 건축문화자산 보존 및 활용 △지역특화 문화공간 육성 및 건축·도시공간 조성 △건축자산 DB구축 △건축교육 저변확대방안 등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논의와 자문이 이뤄졌다.

이홍규 도 건축도시과장은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TF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충남도의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계획의 전문성 및 실행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 TF팀은 도 건축관련 계획수립에 상시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역현황에 밝고 연구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지역전문가와 관련 상위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TF팀은 ‘공간복지디자인’, ‘녹색건축 및 산업’, ‘건축문화’ 등 3개 분과로 이뤄지고, 각 분과는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되어 총 12명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게 된다.

2014.01.21.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올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1750동 철거 예산 50억 4000만 원 확보...가구당 288만 원 지원

충남도는 석면 비산에 의한 도민의 건강피해 예방과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50억 4000만 원을 투입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관리정책 강화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2% 증액된 50억 4000만 원을 확보하고, 도내 1750동의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처리할 방침이다.

예산 증액에 따라 올해부터 가구당 철거비용이 240만 원에서 288만 원으로 인상되고, 국고보조율도 96만 원(40%)에서 144만 원(50%)으로 확대돼 주민 자부담과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오는 2월 말까지 해당 시·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사업대상자 선정은 신청자의 연령과 소득수준, 건물의 노후정도 및 면적 등을 토대로 시장·군수가 선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그동안 자부담 발생에 따른 주택 소유자들의 사업포기로 인해 추진성과가 미미했다”면서 “올해부터는 현실에 맞는 처리비 지원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 만큼 도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1.21.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정부, 올해 385개 공간정보 사업 추진... 2,946억 원 규모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계획도 확정

정부는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및 정부 3.0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수립한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세부 추진을 위하여 2014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계획, 국가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계획 등 3개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개 계획을 최종 확정하기 위하여 1.24일(금)에 국가공간정보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확정된 2014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금년도 중앙·지자체가 시행하는 385개 공간정보 사업에 2,94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투자 내역을 보면,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의 발전과 3차원 및 실내공간정보 등의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2,479억)을 투자하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등 공간정보 활용 확산사업(238억), 공간정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공간정보 기반조성 사업(222억) 순으로 투자한다.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사업은 공간정보와 행정정보, SNS 등의 민간정보를 융복합한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총 588종의 공간정보, 행정정보, 민간정보로부터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융합 DB 80종을 구축하고, 구축된 융합DB를 분석하여 부동산 수요패턴 분석, 맞춤형 철도관광상품 등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모델도 개발한다.

아울러, 구축된 공간 빅데이터를 각 기관들이 정책수립 및 의사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간빅데이터 활용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공간빅데이터를 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을 통해 민간에도 개방하는 등 활용을 적극 촉진한다.

국가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계획(14~18)은, “창조경제와 정부 3.0을 선도하는 공간정보 인재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2018년 까지 공간정보 창의인재 2천명을 양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I) 산업맞춤형 교육 강화, II) 청소년 창의인재 양성, III)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8대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그간 석·박사 위주의 인재양성 사업이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공급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 취업예정자 고용연계 아카데미 운영 등의 과정을 신설하여 산업맞춤형으로 수립된 것이 특징이다.

■ 주요과제 및 세부추진 과제

I. 산업맞춤형 교육 강화	I-1. 공간정보 특성화고교/전문대 육성
	I-2.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
	I-3. 취업예정자 고용연계 아카데미 운영
	I-4. 재직자 직무역량 아카데미 운영
II. 청소년 창의인재 양성	II-1. 초중고 공간정보 창의동아리 지원
	II-2. V-world를 활용한 초중고 디지털교육 지원
III.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III-1. 온라인교육 포털 확대 개편
	III-2. 공간정보 교육 인증제도 마련

이 밖에도, 금년도에는 민간의 공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오픈 플랫폼 인프라 고도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스마트 팜 맵 구축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부처간 협력사업, 국민의 생활·안전 분야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2014.1.24.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주택을 개조해 드립니다

부산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개선사업 실시

부산시는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주택 구조 때문에 장애인의 가정 내(외) 일상생활과 활동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공동으로 ‘저소득 중증 장애인 주거개선사업(이하 주거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총 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14개 구·군 40가구에 화장실개조, 경사로,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제거 등의 주거개선사업이 실시됐다. 사업이 끝난 후 주거개선 전·후를 비교한 결과 주거환경의 만족도는 3가구에서 36가구로 급격하게 상승했으며 주거환경의 불편은 32가구에서 2가구로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거개선사업에 대한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올해는 부산시 예산(2억 원)으로 40가구,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업무협약(2억 원)을 통해 40가구, 총 80가구에 대해 주거개선사업이 확대·시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2월 14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중 자가이거나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경우 가능하다.

대상지는 장애유형·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교수 및 복지전문가 등의 현장 합동 실사를 거친 후 장애유형별로 실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외부 활동을 위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고 집안 내에 있는 계단, 문턱 등을 제거하거나 화장실 문턱 제거 및 안전손잡이 설치 등으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일 예정이다.

2014.1.27.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분할 “지금 신청하세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제정된 특례법으로, 충북도에서는 올해 1월까지 43건 88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정리 및 분할등기를 완료하고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여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례법 시행기간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견폐율,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에 저촉되어 분할을 하지 못하였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주고 있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5년 5월 22일까지 운영하는 한시적인 특례법인 만큼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01.27.

..... 충청북도 공보관

토지정보를 하나로! “부동산종합공부” 제도 시행

충북도는 토지대장등 부동산 분야 공적 장부 18종을 하나로 묶어 통합 발급하는 “부동산 종합공부” 제도를 지난 2014.1.18일부터 본격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9년부터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토지대장 표시사항, 국·공유지 및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공부 상호간 오류자료 575천여 건을 정비하고, 2013. 12월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KRAS¹⁷) 구축을 완료하여, 그간 토지대장 등 지적분야 7종, 건축물대장 등 건축물분야 4종, 개별주택가격 등 부동산 가격분야 4종 및 등기부등본 등 등기분야 3종으로 나뉘어져 각각 발급되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1종으로 통합 발급하는 획기적인 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8일 부터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부동산종합공부를 발급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필지당 종합형이 1,500원이고 소유자가 필요한 서류만을 선택한 맞춤형은 1,000원이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On-Line 발급이 가능한데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종합형이 1,000원, 맞춤형은 800원이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동산 종합공부” 제도 시행으로 부동산 분야 공적 증명서 통합에 따른 행정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도민 개개인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도모, 부동산공부 발급 수수료 경감 등 ‘부동산 관련 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2014.01.27.

..... 충북도청 공보관

¹⁷ KRAS : Korea Real Estate Administration Intelligence System

이타미 준 바람의 조형

“사람의 생명. 강인한 기원을 투영하지 않는 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는 건축물은 태어날 수 없다. 사람의 온기, 생명을 작품 밑바탕에 두는 일. 그 지역의 전통과 문맥, 에센스를 어떻게 감지하고 앞으로 만들어질 건축물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지형과 ‘바람의 노래’가 들려주는 언어를 듣는 일이다.”

- 이타미준 / 『ITAMI JUN-Architecture and Urbanism』 중

‘이타미 준 바람의조형’ 전시 중 ‘이타미 준의 아틀리에’, / 사진 이경신

「이타미 준: 바람의 조형」 전(2014.1.28.~7.27)은 제일동포 건축가 이타미 준(1937~2011, 한국명 유동룡)이 탐문했던 건축과 예술의 관계와 합일의 여정을 그리는 전시다. 미술관에 기증된 이타미 준 아카이브와 주요 소장품으로 구성된 이번 회고전은 일본에서의 1970년대 초기 작업부터 말년의 제주도 프로젝트까지 40여 년에 걸친 그의 건축세계를 아우른다. 건축 작업뿐만 아니라 회화, 서예, 소품 등 다양한 작품 속에 담긴 건축가의 심안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에는 한국과 일본, 건축과 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든 작가의 자취가 펼쳐진다.

전시는 1부~6부로 구성되며, <1부-근원>은 이타미 준의 회화작업, 서예 공예품, 저술 등이 전시되어 건축 외 다양한 예술 활동을 추구했던 작가의 자취를 담고 있다. 잡지와 출판물, 인터뷰 영상 등이 있는 아카이브 코너가 마련되어 이타미 준 건축작업의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다.

<2부, 3부, 4부-전개>에서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타미 준의 건축여정을 따라가 본다. 초기 일본에서의 작업부터 말기 한국에서의 작업에 이르기까지 시대순으로 작가의 작업을 살펴볼 수 있다.

<5부-바람의조형: 제주프로젝트>에서는 이타미준 작업의 절정에 해당하는 제주도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수풍석 미술관을 비롯, 포도호텔, 두손 미술관, 방주 교회 등이 전시되어 있다. 시간의 흐름에 변화하는 자연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수풍석 미술관 영상이 함께 전시된다.

<6부-이타미 준의 아틀리에>에서는 작가의 실제 작업 공간을 재현하였다. 직접 사용한 책상, 의자, 책, 문구류뿐만 아니라 수집한 공예품, 현대 회화 등이 전시되어 있다.

글> ‘이타미 준: 바람의조형’ 브로슈어 참고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도시 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 건축자산 DB를 구축·서비스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건축 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31-90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관양동) 아크로타워 B동 706-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B 706-1, Acrotower Office, 230 Simin-dae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431-908, Korea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